

대통령은 용산으로 국방부는 강원도로

양 철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용산 시대” 국방부는 어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이하 “청와대”)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 이전 공약은 30여 년 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고,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며 청와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아니다. “탈권위”가 명분이었고, 안보 공백 우려, 소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국회 승인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그대로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하여 역대 정부와 차기 정부의 차이가 있다면 이전 지역이 광화문이나 세종이 아닌 용산(국방부)이라는 점이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이동에 따라 국방부 조직이 분산된다. 장·차관실, 기획조정실 등 지휘부와 작전대비태세 관련 부서는 기존 합참 건물로 이전하고, 다른 부서와 직할부대, 합참은 국방부 별관, 육군회관, 국방컨벤션, 과천정부청사, 수도방위사령부 등 10여 곳으로 이전한다. 청와대의 이전으로 국방 담당 주무 부처가 연쇄적으로 분산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는 누군가가 놓친 문제가 있다. 바로 국방부의 분산이 최선이었는지 여부이다. 인수위원회는 “취임 전”이라는 제한된 일정 때문에 분산을 먼저 고려했을 수 있다. 국방부를 이대로 뿔뿔이 분산시켜 놓아도 관창은지에 대한 문제는 뒷전이다. 분산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왜 지금까지 이 거대한 조직을 한곳에 모아놓았을까? 그래도 모여있는 형태가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국방 관련 조직이 연쇄 이동함에 따라 국방부가 결국 용산을 떠날 것이라는,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통합과 “국방수도” 강원

세종으로의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수도권 일극화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추진된 행정수도는 결국 제2의 서울이 되었다. 대통령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부처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서울 내 또는 수도권으로의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의 제정 목적은 수도권에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인수위원회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제수도’ 서울, ‘해양수도’ 부산이 있다. ‘문화수도’ 광주,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도 있다. 그렇다면 용산을 대체하여 ‘국방수도’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은 어디일까? 바로 강원도이다.

첫째, “국방”과 “경제특별자치도”를 연계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강원도에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했다. 그러나 무슨 경제인지,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인 강원도는 그 해답을 “국방경제”의 관점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 차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메가시티에서 소외된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하여 5대 광역 메가시티에 연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원도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3대 광역권과 연계된다. 춘천, 원주 등 수도권 바로 옆에 강소도시로서 잠재력을 가진 중소도시가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 업무의 통합을 위한 국방부의 강원도 이전과 국방산업, 특히 “AI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다.

셋째, 강원도에는 국방부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다. 국방부 이전에 필요한 부지와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부지는 기존의 미활용 군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향후 국방 관련 부처의 통합이 논의될 때 최소한 부지 비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 미활용 군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국방부와 관련 기업의 강원도 이전은 사람의 유입을 촉진한다. 사람의 유입은 대학, 병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차기 정부와 강원도가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다.

국방부의 강원도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법적 제약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정부는 “이전대상 제외 부(部)”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했다. 「행복도시법」 어디에도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기 때문에 행복도시로의 이전만 가능하다면, 「경제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국방부 이전을 포함하거나 「강원지역 국방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8조(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이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원에서 전주로, 해양경찰청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했다.

“용산을 대체하여 ‘국방수도’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은 어디일까? 바로 강원도이다.”

“국방수도” 강원, 제약요인과 가능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

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과천	법무부, 방위사업청 등
대전/청주	관세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전주	농촌진흥청(수원→전주) : 균형발전 + 농업특화
인천	해양경찰청(인천→세종→인천) : 해양 업무 효율성 제고

셋째, 신속한 안보 대응을 위해 청와대의 인접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까지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지금까지도 용산에서 청와대까지 차가 막히면 한 시간도 더 소요됐다. 급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은 차량이 아닌 헬기로 이동하면 된다. 백악관의 웨스트윙(West Wing)처럼 오벌 오피스(Oval Office) 옆에 국방부 장관실을 만들면 된다. 공간적 거리는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초등학교에서조차 화상회의를 하고,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우려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이 취약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접경지역에 국방부와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위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남부는 서울과 유사한 위도에 있고, 최첨단산업 기반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지리적 위험성은 어느 지역이나 같은 조건이다.

“국방수도” 강원, 결국, 의지의 문제

법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국방”과 연계하여 “경제특별자치도”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유익하다. 3대 광역권과의 연계성도 양호하다. 국방부 이전과 연관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전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여야의 합의에 달려 있다. 강원도 발전과 국방 기능의 통합, 특히 강원도만의 발전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고 안보역량이 유지되며 차기 정부의 정책구상에 부합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이유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여야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강조했다. 당시의 생각과 외침이 표를 얻기 위한 공염불이 아니길 기대한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며,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UNIFICATION-NORTHERN RESEARCH CENTER

발행번호

No. 22-1 (통권 16호)

발행일

2022년 4월 5일

통일·북방정책포커스는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본 포커스에서는 통일·북방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일·북방연구센터: ljh527@rig.re.kr/033-250-2985